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고령화·올림픽 대비 무장애시설 대상 건축물 확대

산업·경제 코워킹 공간 재산세 면제로 학생·구직자 지원

사회·복지 간병비용 지원해 중증장애인 가족 일상생활 보장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별 'X' 표기 허용 전망
육아·간호휴직 장려하는 기업에 지원금 제공

행재정·교육 38개 지역 대학·학생 중심의 마을만들기 추진

도시계획·주택 '일자리부터 환경까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개선

정보·기타 인공지능 기술로 교통·치안 등 도시문제 해결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고령화·올림픽 대비 무장애시설 대상 건축물 확대

숙박시설 신·증개축 시 의무화...규제·지원정책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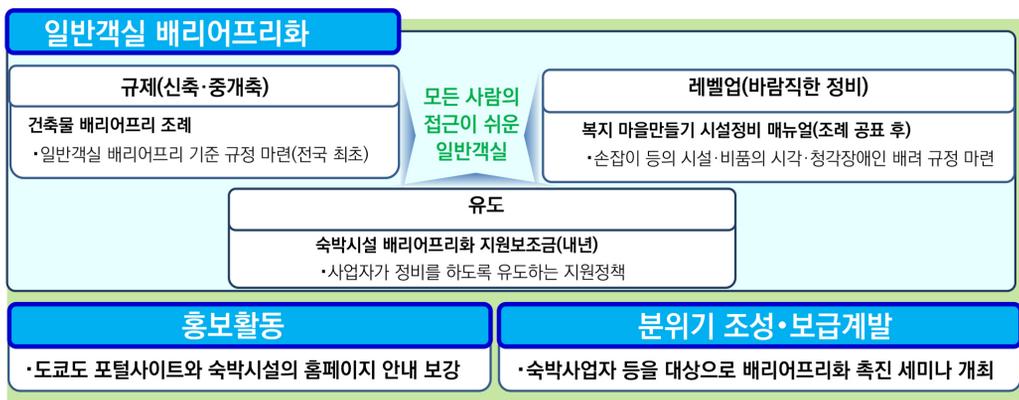
일본 도쿄都 / 도시계획·주택

일본 도쿄都는 고령화시대 대비 정책을 진전시키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시설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시행함. 특히, 숙박시설을 대상으로는 신축·증개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배리어프리 건축물을 늘려나가고자 함

주요 내용

-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를 개정해 배리어프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
 - 도쿄도는 고령자·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의결(9월부터 시행)
 - 고령화 대비 정책의 진전과 2020년 도쿄올림픽의 준비를 위해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 전국에서 가장 선구적인 배리어프리조례
- 배리어프리 시설 의무 적용대상의 확대가 골자
 - 배리어프리법에 명시된 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를 조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
 - 배리어프리법은 특별특정건축물(불특정다수, 또는 고령자·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도쿄도 조례는 공동주택, 학교 등 특정건축물(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
 - 배리어프리법의 배리어프리 시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2,000㎡ 이상이지만, 조례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 500~1000㎡ 이상의 건물도 대상
 - 건축물 이동원활화 기준도 강화하고, 유아용 의자·침대와 수유실 같은 육아지원 시설의 정비도 요구
-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숙박시설의 정비기준도 조례로 설정
 -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는 숙박시설 중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객실이 대상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착공할 수 없음

- 객실까지 이동경로와 출입구 등의 배리어프리 기준 마련
 - 객실까지 계단이나 턱을 거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
 - 객실 출입구와 내부 화장실·욕실 등의 출입구 폭은 80cm 이상, 복도 폭은 140cm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 내부에도 계단이나 턱이 없어야 함
- 규제·유도·정비의 3가지 측면에서 숙박시설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홍보
 - 조례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보조금으로 배리어프리화를 유도하며, 마을 만들기 매뉴얼 등을 활용한 시설정비로 숙박시설 접근성을 향상



[그림 1] 도쿄도 숙박시설 배리어프리화 개요도

- 숙박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배리어프리 기준도 정비
 - 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에서 각 가구까지의 이동 경로 중 한 곳 이상은 배리어프리 경로로 정비하도록 함
 - 배리어프리 경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출입구 폭은 80cm 이상, 복도 등 부지 내 통로 폭은 120cm 이상, 엘리베이터 안 쪽은 115cm 이상
 - 경사로 폭 120cm 이상(계단 병설 시에는 90cm 이상), 기울기 1/12 이하(높이 16cm 이하는 1/8 이하)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unyabetsu/machizukuri/bfree/index.html>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unyabetsu/machizukuri/bfree/pamphlet.pdf>

http://www.metro.tokyo.jp/tosei/governor/governor/kishakaiken/2018/10/documents/181019_02.pdf

코워킹 공간 재산세 면제로 학생·구직자 지원

프랑스 파리시 / 산업·경제

프랑스 파리시는 세금감면의 방식으로 벤처기업과 코워킹(Co-working)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올해는 ‘이노베이션 팩토리’(Innovation Factory)라는 새 코워킹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구직자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작업 공간과 사회교육 제공을 지원

배경

- 2015년 일명 ‘마크롱 법’ 시행 이후 코워킹 공간 지원을 시작
 - 마크롱 법은 현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경제 부장관 시절에 마련한 친기업·규제완화 성향의 법안
 - 공식 명칭은 ‘성장, 활동 및 경제기회 균등을 위한 법’(Loi pour la croissance, l'activite et l'egalite des chances economiques)
 - 파리는 마크롱 법에 따라 벤처기업, 인큐베이터 랩, 소규모 기업 등이 사용하는 코워킹 공간의 재산세(토지세와 건물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지원을 결정
 - 아래 [표 1]과 같이 부과하는 재산세를 코워킹 공간에 한해 면제

[표 1] 파리시 재산세 부과 기준(1㎡당)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일반가	할인가	일반가	할인가	일반가	할인가
사무실	19.31유로 (25,700원)	9.59유로 (12,750원)	10.55유로 (14,030원)	6.34유로 (8,430원)	5.08유로 (6,760원)	4.59유로 (6,100원)
상가	7.86유로(10,450원)		4.06유로(5,340원)		2.05유로(2,730원)	

주 1: 1~3지구는 파리 선거구에 따른 구분

주 2: 할인가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문화시설, 협회 등에 적용

- 또한, 2016년부터 사회진출·일자리 관련 예산 중 2천만 유로(266억 원)를 코워킹 공간 마련에 지원하기 시작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창업과 협업, 고용의 활성화가 목적
 - 파리의 지원정책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코워킹 공간에 투자를 시작

주요 내용

- 2019년, 파리시의 지원으로 새로운 코워킹 공간 ‘이노베이션 팩토리’ 개설
 - 파리 13구에 자리 잡았으며, 상업적 목적의 협회보다 학생·구직자의 공동작업이나 사회교육 제공 공간으로 사용
 - 공동작업실은 53㎡의 면적에 20개 좌석, 4인용 회의실, 8개 컴퓨터 좌석 등을 구비
 - 한 공간에서 학교, 벤처기업, 스타트업, 싱크탱크, 연구소 등을 비롯해 약 40개의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1] 파리 이노베이션 팩토리의 공동작업실

- 코워킹 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청년 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에타프 디자인(Etape Design)
 - 학교시스템 밖에서 사회에 진출하려는 17~26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웹 디자인 교육과 취업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
 - 기존의 학교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분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
 - 18~25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1년 동안 웹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수업과 코딩,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을 배움
 - 전문가와 함께 공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6개월의 인턴 후 학생별 개인맞춤 수업을 받을 수 있음
 - ‘파리코드’(ParisCode)라는 IT개발자 양성 프로젝트를 병행해 2020년까지 2,000명을 교육하고 관련 분야에 취업시키겠다는 목표 수립

-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 디지털 활용능력평가를 위한 6개의 아틀리에, 회사창업 아틀리에 3개, 5개의 주제별 디지털 콘퍼런스, 웹 마케팅을 주제로 한 6개의 아틀리에, 디지털 분야 직업관련 아틀리에 3개, 구직관련 아틀리에 3개를 국립 구직센터(Pôle Emploi)와 협력해 구성
- 이 교육은 파리 13구청의 행정지원을 받으며, ‘블루서치’라는 디지털 전문가 자문 서비스에서 이력서 작성법과 구직활동을 지원

<https://www.cowork-in.fr/loi-macron-soutient-le-coworking/>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23372523&cidTexte=LEGITEXT00006069577>

<http://www.innovationfcty.fr/>

<https://www.paris.fr/actualites/un-espace-de-travail-partage-a-l-innovation-factory-6589>

<https://www.bureauxapartager.com/coworking-paris>

<https://www.thebusinessplanshop.com/fr/blog/ouvrir-un-espace-de-coworking>

김 나 래 통신원, naraetravaux@gmail.com

간병비용 지원해 중증장애인 가족 일상생활 보장

이탈리아 로마시 / 사회·복지

이탈리아 로마시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정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최근 신청자 접수를 시작함. 지원 대상에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과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며,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지원까지 제공

배경

- 이탈리아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간병비용을 지원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
 - 2016년 국회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및 가정간병인 보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불안정한 정치지형 탓에 시행이 미뤄짐
 - 로마시는 이 법안이 중요한 민생현안이라는 판단 아래, 2018년에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
- 시정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정책의 시급한 실행을 결정
 - 첫째, 중증장애인과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필요한 간병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
 - 둘째, 저소득 가정은 이에 관한 사회적 배려나 재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
 - 셋째, 연간공제 비용이 간병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

주요 내용

- 지원정책의 목표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간병인 등의 필요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에 체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보건·사회 복지·의료 지원을 제공
 - 설계 단계는 물론 관리·전달 과정에서도 공식·비공식 서비스 시스템을 연결
 - 개인·가족·사회 자원을 통합하여 중증장애인 지원을 보장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함께 부양

- 지속적인 조정과 관찰을 이행
- 특정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계획을 추진
-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되도록 행정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 혹은 가족 구성원이 구청에 신청하도록 공지
 - 중증장애인 또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 중 경제적으로 가정간병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 간병 전문인력이나 업체의 이용 비용을 지원
 -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간병비용을 지원
 - 간접 형태의 관리 비용: 대상자(중증장애인) 또는 가족(가족 보조원)이 선택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비용으로 월 800유로(106만 원)를 지급
 - 직접 형태의 관리 비용: 거주 지역의 인가 기관이나 관련 사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월 700유로(93만 원)를 지원
 -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제출 서류는 공인된 시설의 전문의 확인서, 경상소득 증명서,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 신청서
 -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는 지원을 중단
 -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입원 환자
 - 의료기관이나 사회 보건시설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을 돌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수혜자가 다른 시(市)나 주(州)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시기가 다를 수 있음

<https://www.comune.roma.it/web/it/scheda-servizi.page?contentId=INF117423>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16/11/30/16A08314/sg>

https://www.comune.roma.it/web-resources/cms/documents/Deliberazione_Giunta_capitolina_7_2018.pdf

<http://www.agenziaentrate.gov.it/wps/content/Nsilib/Nsi/Schede/Agevolazioni/AgevDisab/V5AgevDisab/?page=agevolazionicitt>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별 'X' 표기 허용 전망

미국 하와이주 / 사회·복지

미국에서 성소수자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하와이주는 공식 신분증상의 성별 표기가 여성(F)과 남성(M)의 2종류로만 가능한 것이 성소수자 차별 원인 중 하나임을 파악하고, ID카드·운전면허 등의 신분증에 제3의 성별 'X'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준비 중

배경

- 하와이주는 미국 내에서 성소수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
 - 지난 2016년 미의회가 발간한 'Williams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주의 성소수자 거주 비율은 5.1%
 -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양육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
- 성소수자 차별·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 성차별적 정부 정책과 사회 규범 등 때문에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피해가 크다는 2013년 하와이 대학교 조사 결과
 - 지난해 미 보건부가 공개한 '성과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에서도 성소수자가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 등으로 건강·사회·경제·정치 분야에서 불평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
-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젠더 논바이너리'(Gender Non-binary)를 하나의 성별로 인정하려는 시도
 - 젠더 논바이너리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정체성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제3의 성별로, '젠더 퀴어'(Gender Queer)라고도 불림
 - 주의회는 제3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

주요 내용

- 주의회는 신분증상의 이분법적 성별 표기가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
 - 공식적인 신분증에 명시된 성별 표기가 성소수자의 차별을 가능케 하며, 부당한 사회·경제·정치적인 피해를 주게 하는 대표적 이유라고 분석

- 제3의 성별을 공식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 개인 ID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공식 신분증에 여성(F), 남성(M), 외에 제3의 성별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별을 성소수자가 직접 선택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사회적 편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
 - 하와이주의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법안 상정에 관해 의견을 밝힘
 -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법 집행기관과의 상호작용 시, 은행계좌 개설, 아파트 임대차, 보험 가입·신청 등의 상황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전폭적 지지 의사를 밝힘
- 법안 통과 시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에 제3의 성별 기재가 가능
 - 기존 ID카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신청을 하면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할 예정
 - 변경될 신분증 상단에는 법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신분증 번호 외에 스스로 선택한 성별이 표시
 - 신분증 성별 변경은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도록 함
 - 임의 발급을 막고, 개인의 선택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는 조치

관련 사례

- 미국 내 여러 지자체가 제3의 성별 공식 인정을 추진 중
 - 지난 2009년에 제3의 성별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그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17년부터 제3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
 -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리건, 아칸소 등의 주에서 개인 ID카드, 운전면허증 외에 출생증명서, 학교 입학 서류 등에 '제3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 중
 - 하와이주도 이에 따라 공항 입국심사용 서류에 'LGB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왔음
 - 올 2월 뉴욕시와 뉴저지주는 출생 후 부모의 선택에 따라 제3의 성별 'X'를 출생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
 - 이때 의사 진단서 없이 부모 스스로 제3의 성별 기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부수적인 행정 과정 일체를 생략하는 등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이 화제가 됐음

- 해당 자녀는 18세가 된 이후 출생증명서 내의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 변경할 수 있음
- 현재 출생증명서에 X성을 법적으로 허용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 D.C., 뉴욕주, 뉴저지주 등 5곳
- 한편에선 입학신청서 등 교육기관용 공문서에도 제3의 성별 기입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 워싱턴 D.C. 교육 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신입생 모집에 사용하는 공식 문서에 제3의 성별 기입을 허가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9/bills/HB1165_SD2_.pdf

https://www.capitol.hawaii.gov/measure_indiv.aspx?billtype=HB&billnumber=1165&year=2019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9/Testimony/HB1165_HD2_TESTIMONY_TRS_03-15-19_.PDF

http://olelo.granicus.com/MediaPlayer.php?view_id=&clip_id=71011&caption_id=14096115

http://olelo.granicus.com/MediaPlayer.php?view_id=&clip_id=71011&caption_id=14096441

<https://www.hawaiinewsnow.com/2019/04/03/gender-x-could-soon-be-an-option-when-applying-ids-drivers-licenses/>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19/bills/HB1165_HD2_.HTM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육아·간호휴직 장려하는 기업에 지원금 제공

일본 홋카이도 / 사회·복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는 저출산·고령화로 남녀 모두의 활발한 사회 활동이 필요해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를 마련함. 근로자가 육아·간호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관련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

배경: 일본의 동향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직장환경·사회환경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저출산·고령화로 남녀가 모두 육아·간호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정비가 주요 과제로 인식
 -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육아간호휴업법’이 개정되고, 육아나 간호를 위한 휴직 제도나 단시간 근무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됨
 - 또한, 2018년에는 시간외 근무 상한 규제나 연차유급휴가의 확실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법 개혁 관련법’이 공포되고, 2019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주요 내용: 홋카이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사업자 지원: 육아·간호휴직 장려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보조금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활약 추진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쉬운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남성에게 일정 기간 육아휴직이나 육아 목적의 휴직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간호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간호휴직, 간호휴직자의 직장복귀, 일하면서 간호하기 위한 근무제한제도 등을 원활히 운영하는 사업자
 - 육아 복귀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직장복귀를 의무화하는 사업자 등
 - 임신·출산·육아·간호를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적절한 평가를 받고 복귀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한 사업자
 -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라 여성 활약의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인 ‘홋카이도 가족 응원 기업’(北海道あったかファミリー応援企業), 또는 여성의 활약을 지원하는 기업인 ‘홋카이도 나데시코 응원 기업’(北海道なでしこ応援企業)에는 사업 자금을 저금리로 용자
- 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기업에는 일정 조건 아래 시설 정비비용과 운영비 등을 보조
- 근로자 지원: 생활자금 용자, 모성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계절노동자, 기업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사람에게 의료, 교육, 관혼상제 등의 생활자금을 용자
 -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기업담당자나 계속 일하려는 여성에게 모성건강관리 관련 정보 제공
- 가족지원센터: 유동적인 보육수요에 대처하는 지역 상호지원 조직
 - 갑작스러운 잔업이나 보호자의 질병 등 기존 보육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변동적, 변칙적인 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조직
 - 육아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이 회원이 되어 지역 내 육아 상호지원 조직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 가족 응원기업 등록제도, 나데시코 응원기업 인증제도 시행
 - 도 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 활동 중인 종업원 1명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이나 여성활약을 지원하는 기업임을 인증하고 혜택을 부여

[표 1] 홋카이도 가족 응원기업, 나데시코 응원기업 개요

	가족 응원기업 등록제도	나데시코 응원기업 인증제도
대상	홋카이도 내에 사업소가 있는 종업원 1명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도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 활동을 하는 종업원 1명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등록/인증 요건	①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후생노동성에 신고할 것 ② ‘육아간호휴업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휴업 규정을 정할 것 ③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할 것	① 홋카이도 가족 응원기업으로 등록할 것 ②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후생노동성에 신고할 것 ③ 여성 활약응원 자주선언을 하고 그 내용을 실천할 것 ④ ②의 행동계획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할 것
혜택	① 심벌마크 사용 허가와 도 홈페이지에서 소개 ② 도 사업 참가기업 심사 시 가점 부여 ③ 공공조달이나 업자 선정 시 배려 ④ 저금리 용자	① 구인 시 홋카이도지사가 인정한 기업임을 표시 ② 도 사업 참가기업 심사 시 가점 부여 ③ 도 홈페이지에서 인정 기업임을 소개 ④ 홋카이도 나데시코 응원기업 표창

<http://www.pref.hokkaido.lg.jp/kz/rkr/rsf/yutori/ryouritu/ryouritutup.htm>

<http://www.pref.hokkaido.lg.jp/kz/rkr/grp/05/hand04.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38개 지역 대학·학생 중심의 마을만들기 추진

일본 교토市 / 행정장·교육

일본 교토市는 지역에서 대학과 학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추진 중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교토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유학생 유치, 대학·학생의 국제화 추진,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행하며 ‘대학마을 교토·학생마을 교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

배경

- 교토시는 38개의 대학·단기대학이 있는 ‘대학마을’이자 인구의 10%가량(15만 명)이 학생인 ‘학생마을’
 - 이 때문에 교토의 마을만들기에서 대학·학생은 중요한 주체이며, 이들의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대비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하나 - 저출산·고령화에 더해 대학과 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 심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활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교육은 중요한 목표
- 교토시와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주도로 ‘대학마을 교토·학생마을 교토 추진계획 2019~2023’을 수립
 - 대학, 학생, 산업계, 비영리조직(NPO), 시민 등으로 구성된 ‘대학마을 교토·학생마을 교토 추진회의’의 논의 결과, 각 대학과의 의견 교환, 시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작성

주요 내용

- 대학·학생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
 - 현황을 살펴보면, 18세 인구 감소와 학생유치 경쟁 심화 등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유학생 증가 경향이나 취업률 개선 등 긍정적 측면도 있음
 - 앞으로의 과제는 교토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학마을’, ‘학생마을’을 이어가기”를 목표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학·학생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교토 전역에서 다음 사회를 뒷받침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목표 아래 SDGs와 회복력 등을 고려한 실현 방침을 확정
 - 천년을 넘어 도시 기능·문화가 계승·발전된 특별한 세계적 도시 ‘교토’에서 배우는 의의를 재확인하고, 누구나 학습을 통한 성장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함
 - 교토의 모든 대학이 개성·특색을 살리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유학생·사회인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 유치 등 대학이 수립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지원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유학생을 포함한 학생과 지역·기업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교토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
 - 대학의 지(知), 학생의 힘(力)을 최대한 살리고, 산업·문화의 창조·발전, 지역 활성화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
- 구체적 정책
 - 교토에서 배우는 매력 향상
 - 대학 간 연계로 학습역량 강화,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대학 경영·운영 지원, 대학시설 정비 지원·유도 등
 - 대학·학생 국제화 촉진
 - 유학생 유치 촉진, 유학생 환경 정비, 유학생의 진로·사회진출 지원, 일본인 학생의 해외 유학 촉진에 이바지하는 학습 강화, 해외 대학과 교류 촉진 등
 - 대학의 틀을 초월한 학생 활동 추진
 - 학생의 주체적 활동 촉진, 학생이 지역 마을 만들기에 이바지할 기회 확충, 대학 졸업 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습 기회 확대, 학생이 교토의 문화·매력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등
 - 학생의 진로·사회진출 지원
 - 교토 지역기업과 연계한 담당자 육성, 지역기업의 매력 홍보,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과 학생을 둘러싼 노동 환경 개선 등
 - 대학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교토 경제·문화·지역 활성화
 - 100세 시대를 고려한 평생 학습 추진, 산학연계를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과 교토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환경 향상, 대학과 지역사회, 초·중·고 간 연계 추진 등
 - 국내외 홍보 강화
 - 중고생, 학부모,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마을 교토·학생마을 교토’의 매력을 홍보하고, 대학과 시민을 위한 홍보도 병행

<https://www.city.kyoto.lg.jp/sogo/page/0000249644.html>

<https://www.city.kyoto.lg.jp/sogo/cmsfiles/contents/0000249/249644/sasshi.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일자리부터 환경까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개선

프랑스 파리시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파리시는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고 파리 동쪽과 서쪽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생을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지역(Quartiers Populaires)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2015년부터 기울였음. 같은 맥락에서 올해는 주민의 건강, 주거, 교육, 문화,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부터 공공녹지 확보와 도시농업 프로젝트, 사회 체육시설 확충까지 다방면의 실행방안을 내놓음

2019 파리 도심 빈민가 개선방안

- 3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파리시 내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
 - 파리시 예산의 1/4을 이 취약지역 발전계획에 배정
 - 8억 6,500만 유로(1조 1,504억 5천만 원)는 주거와 도시환경 개선에, 4억 3,600만 유로(5,798억 8천만 원)는 공용 공간의 질 향상에, 3억 800만 유로(4,096억 4천만 원)는 교육, 1억 3000만 유로(1,729억 원)는 청소년과 스포츠, 8,700만 유로(1,157억 1천만 원)는 문화분야에 투자
-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겨냥해 이 지역 주민에게 1,000개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
 - 83개 단체에 정규직 199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 취약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와 환경 개선
 - 어린이들이 가족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숨쉬는 파리’(Paris Respire: 자동차 통행제한 프로그램) 계획을 확대 시행
 - 도보확충과 나무상자를 이용한 철길 옆 화단설치
 -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교육과 참여 독려
 - 사회주택 40,000개를 수리·리노베이션하고, 4,500개 노후 난방설비를 교체·수리
 - 파리 14, 18, 19구에 새로운 공동주거 시스템 구축
 - 자전거 교육공간 제공, 자전거 수리 실습 수업, 자전거 정거장 확충
 - 철망으로 둘러싸인 농구장 등 스포츠 공간 마련



[그림 1] 지하철 고가도로 아래 도보공간 개선방안(위: 현재 모습, 아래: 계획안)

- 골목식당 등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 SEMAEST(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리지 혼합경제 준공기업)의 임대차 계약 관련 선매법 시범 시행
 - 선매법은 한국의 토지 선매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파리시가 SEMAEST에 선매권을 위임해 활성화 대상 지역 혹은 상업지역에서 개인거래보다 우선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 파리 경찰청과 연계해 도시 안전과 관련한 응급 연락 지원 시스템 구축
 - 도심 빈민가 상점에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계
- 문화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주민에게 여가와 놀이문화를 제공
 - 음악과 오케스트라를 이용한 사회교육 프로젝트 'DEMOS'를 실행해 빈민가 어린이 105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오케스트라 신설

- 운하 축제 마당(Canal en Scène)
 - 오는 6월 29일 파리시 주관으로 라 빌레뜨 운하에서 수상 스포츠, 공연, 무도회, 워터쇼, 불꽃놀이 축제가 열림
 - 파리 플라쥬 2019(파리 센강 주변 모래사장 여름축제)의 연장선상에서 라 빌레뜨 운하까지 거리문화 축제도 예정됨
 - 이 행사는 파리 북동지역의 공용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문화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 지역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기획
 - 바흐베-샤펠-스타랑그라드(Barbès-Stalingrad) 도보 산책길 정비
 - 도심 녹지대 형성을 목적으로 약 540m²의 보행로를 정비해 공원으로 진입을 쉽게 함
 - 공원 이벤트와 공연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설치
 - 신문가판대를 ‘책상자’라는 자율도서대여 상자로 변경하고, 야외 도서관을 광장에 설치
 -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축제 이벤트 구성
 - 주민이 벼룩시장 등 지역 이벤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간편한 시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
- 그 외 거리의 치안·청결 유지 등에도 노력하고, 노숙자 지원 시스템도 강화
- 거리의 치안유지와 소란방지를 위해 도시 경찰을 이 지역에 우선 배치
 - 노숙자 지원 시스템(UASA: Unité d'assistance aux sans-abri) 강화
 - 올여름 바캉스 기간 전에 파리 북동쪽과 13구에 쥐와 새들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거리 휴지통을 설치할 계획

<https://www.paris.fr>

<https://www.paris.fr/actualites/quartiers-populaires-un-nouveau-plan-d-actions-6696>

<https://www.paris.fr/promenade-urbaine>

<https://www.pariszigzag.fr/paris-au-quotidien/canal-en-scene-les-trucs-de-fou-quon-pourra-faire-sur-leau>

김 나 래 통신원, naraetravaux@gmail.com

인공지능 기술로 교통·치안 등 도시문제 해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정보·기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는 민간 스타트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관리에 도입하여 홍수, 교통 혼잡, 치안, 세금징수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배경

- 주정부는 스타트업·시민 협력을 4차 산업혁명의 열쇠로 보고, 스마트시티뿐 아니라 ‘안전한 도시’ 조성에 도입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카르타 외의 여러 지자체도 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분야

주요 내용

- 주정부는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민간기업과 인공지능 기술 협력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
 - 자카르타 소재 인공지능 스타트업 노드플럭스(Nodeflux)가 보유한 안면인식 기술, 피플 카운팅(People Counting) 기술 등을 적극 도입
 - 노드플럭스는 자사의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통신회사 텔콤(Telkom)과 오피스 출입자 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찰청의 국제행사 인파 감시도 협력
 - 주정부도 노드플럭스사의 인공지능을 기술을 홍수, 교통혼잡, 세금징수, 건물 출입 관리 등의 분야에 도입 중
 - 댐과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여 적정 수위 초과 시 실무자에게 신속하게 경보하는 시스템 구축
 -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공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과 통행량을 분석하여 혼잡 시간대에 적절하게 대응
 - 악천후나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의 숫자와 특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미납한 차량 운전자를 포착하여 주정부의 세수 증대와 관리에 이바지

- 이 외에 차량계수(Vehicle Counting), 차량 주정차·통행 감시, 보행자 행동 모니터링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 중
 - 이륜차량, 소·중·대형차량 등 총 23개 차종의 분류·계수가 가능
 - 특정 장소의 차량 주정차 시간을 측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고, 제한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을 탐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발송
 -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달리거나 싸우는 등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도시민의 안전을 확보
- 인공지능 기술로 확보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주정부에 귀속되며 노드플렉스와는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

<https://jakartaglobe.id/context/disruptive-artificial-intelligence-to-make-jakarta-more-livable>

<https://www.asumsi.co/post/revolusi-industri-40-perusahaan-lokal-kembangkan-teknologi-ai>

<https://id.techinasia.com/nodelflux-startup-yang-bisa-membuat-cctv-biasa-mengenal-objek-asing>

<https://www.pikiran-rakyat.com/ekonomi/2017/10/27/nodelflux-ketika-perangkat-digital-memiliki-otak-layaknya-manusia-412430>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57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6월 3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